# 전북경찰, 조직폭력 특별단속 돌입

## 총선 앞두고 불법선거 개입 차단 등 나서

전북경찰청이 15일부터 100일 동안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지역 영세상인에 대한 상습 갈취, 집단 폭행, 협박 등 폭력조직의 위력을 과시해 서민생활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브로커 등과 결탁한 조직폭력배의 불법 선거 개입 등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도내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수사전담반을 증원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 선거 이권을 노린 조직폭력배들의 선거 방해, 후보자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조직폭력배 신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과 재범방지 등 피해자 보호활동도 병행한다.

또한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지역 내 불안감을 조장하는 '동네조폭' 검거 활동도 대폭 강화한다.

경찰은 최근 폭력조직은 대규모 조직원을 거느리고 불법 행위를 일삼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소규모 조직으로 재편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이권이 큰 특정사업의 경우 타 조직원과 결합하는 형태로 활동하는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북경찰이 관리하는 도내 폭력조직은 16개 조직으로, 전주시 6개, 익산시 6개, 군산시 2개, 남원시 2개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폭력조직은 대체로 1980년대부터 도내에 뿌리를 내려 90년대 본격적으로 세력을 넓혔다.

특히 도내 폭력조직은 전북을 벗어나 수도권지역 등으로 세력을 넓혀 전국적 폭력조직과 연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기간 전북지역에서 총 174건을 적발, 21명을 구속하고 1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되는 조폭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하고, 조폭 활동의 기반이 되는 은닉자금은 '기소 전 몰수보전제도'를 통해 모두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몰수 대상인 이 불법 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적 사업 이권에 개입하고 서민들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뿌리뽑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폭력조직의 행패를 목격할 경우에도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노영 기자

### 여성 속옷 상습 절도 지적장애인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15일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A(2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완주군 B(76·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 16점을 훔치는 등 이날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B씨의 집에서 여성 속옷 24점과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6월 B씨의 집에 들어갔다가 발각된 후 "한 번만 더 오면 평생 교도소에 가둬 버린다"는 말을 듣고 B씨를 바닥에 내팽개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박용주 기자

### 공사장 자재 훔친 40대 검거

군산경찰서는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45)씨 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새벽 3시께 경기도 양평군의 한 아파트 공사장 지하 물탱크실에서 스프링클러 헤드 3600개(18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아파트 공사현장 출입 관리가 허술한 새벽시간대를 노려 훔친 물건을 공범 이씨의 BMW 차량에 옮겨 싣고 군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이들은 "훔친 건축자재를 팔아 빚을 갚으려했다"고 진술했다. /이노영 기자

전주시 재가 장애인 욕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15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승수 시장이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전주시, 노후 농업용저수지 정비

##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전주시가 노후된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전주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 저수지의 사전 재해예방과 농경지 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 노후저수지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는 총 44개소로, 이중 41개소가 축조된 지 50년 이상된 노후저수지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부터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해 농업용 저수지 9곳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했으며, 지난 14일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재해위험이 높은 양마제 등 농업용 저수지 3곳에 대해서도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시는 관내 저수지 대부분이 노후화돼 누수와 침식, 제방 붕괴 등 갑작스런 이상 징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안전점검 강화와 함께 확보된 예산으로 보수보강사업 실시해 제방붕괴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노후된 시설물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4억7000만원을 확보해 13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향후 보수보강을 위한 국가 예산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영재기자

# 김승수 전주시장, 기령당 경로당 방문

김승수 전주시장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로당인 기령당 경로당(당장 이상칠)을 찾아 세배했다.

김 시장은 15일 완산동에 위치한 기령당 경로당의 월례회의 및 신년 하례식를 찾아 기령회원 20여명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기령당 경로당'은 과거 퇴임한 지방 관리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풍류를 즐기며 쉬던 장소로, 419년의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특히 기령당은 예로부터 전라관찰사나 전주부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으로 김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령당을 찾아 세배한 후 기령회원들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김영재 기자

## '홧김 방화' 잇따라 인명·재산피해 속출

최근 전북지역에서 '방화' 범죄가 잇따르면서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방화 대부분 홧김에 저지르는 우발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총 38건의 방화가 발생한 가운데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1억4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역시 이달 들어서만 3건의 방화 범죄가 발생해 피해가 잇따랐다.

실제 지난 14일 전주시 인후동의 한 병원 2층에서 환자 김모(48)씨가 간호사 유모(51·여)씨를 폭행하고 복도에 불을 질렀다.

화재 당시 병원에 있던 환자와 간호사 등 20여명은 신속히 대피했지만 7명이 연기를 들이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김씨는 간호사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유씨가 "여기서 흡연은 안된다"며 제지하자 홧김에 자신이 입고 있던 옷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주 기자

# 전주시, 장애유형별 복지 추진

## 재가 장애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

전주시 모든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전주시는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장애인 관련 학계와 기관·단체 전문가 및 실무자, 장애당사자, 장애인 가족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가장애인 욕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주시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미옥 교수)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장애인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욕구조사 결과와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전주시 재가장애인복지 기본계획(안)'이 발표됐다.

용역연구팀은 전주시 장애인복지 정책이 장애인의 욕구와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측해 장애인의 상태와 삶의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으로 설계하기 위해 실시한 장애유형별 욕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이같은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의 기본 원칙과 비전 및 목표, 특화된 지원체계 구성 필요성, 세부 추진목표 및 사업(안)을 담은 전주시 재가장애인복지 기본계획(안)도 제시했다.

연구진은 '장애인이 자신이 살고 싶은 바로 그 지역사회와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삶을 지향하고, 시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재가장애인복지의 비전과 목표를 도출했다. 또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모든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공감과 이해, 어울림의 3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재가장애인의 주거형태와 장애유형, 생애주기, 복지영역 등에 따른 실제적인 지원체계 구성, 세부 추진목표에 따른 기본사업과 장애유형별 맞춤형 사업 등도 제시했다.

시는 이날 중간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장애인과 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달 열리는 최종보고회에서 전주시 장애인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양영숙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복지정책에 제한된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욕구특성 및 복지인프라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주시 재가장애인의 욕구조사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기자